아이뉴스24

'합격률 37%' R&D 예타 기술성 평가, 더 간소화한다

기사입력 2020-04-26 12:50 최종수정 2020-04-26 13:39

과기정통부, R&D 예타 대상사업 선정 제도 개선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과기정통부는 대규모 국가 연구개발(R&D)사업의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심사를 진행하기 전에 예타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기술성 평가' 절차를 '예타 대상선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더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6일 과기정통부는 "R&D 예타의 과기정통부 이관 이후 기술성평가 절차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사업부처에서는 여전히 중복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존재함에 따라,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와 본 예타의 역할 분담을 더욱 명확하게 구분하고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예타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는 본 예타에 앞서 국가연구개발 투자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연구개발 추진 필요성 및 시급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성과 국고지원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는 제도다.

지난해(2019년)의 경우 12개 부처에서 총 83개 연구개발사업의 예타를 신청했으나 예타에 '적합'하다고 평가돼 본 예타로 넘어간 사업은 11개 부처 31개 사업에 불과했다. 부처의 예타요구사업 중 63%가 본 예타를 받아보지도 못하고 탈락한 셈이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는 "예타를 두 번 받는다"는 불만과 함께 예타 대상사업 선정절차인 '기술성 평가'를 간소화하고 본 예타와 달리 요건심사, 정책적· 투자관점을 고려한 사업 선별을 요구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연구현장 및 관련부처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번 제도개선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우선, 예타 대상선정은 국가차원의 상대평가 및 요건심사 역할, 본예타는 사업의 추진 타당성에 대한 절대평가로 역할을 구분했다. 다수의 위원회로 운영되던 평가체계는 본예타를 자문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위원장: 과기혁신본부장)로 회의기구를 통합해 대상선정, 본예타 결과 등 연구개발 예타 전과정을 논의한다.

R&D 예타 전 과정에서의 과학기술 정책-예산-평가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예타 탈락 후 재도전 사업이 많아짐에 따라 예타 대상선정시 부처가 제출하는 사업 우선순위를 비중있게 반영하기로 했다. 예타 신청 전에 부처 내에서 중복 사업을 먼저 걸러 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예타 대상선정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과학기술 정책-예산-평가 연계를 강화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부처의 평가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업들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R&D 예타 제도개선안을 올해 2차 예타 대상선정 절차부터 시행하며, 4월 28~29일 온라인 교육(www.castmedia.kr/rndyeta) 에 이어 5월 6일 15시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상국기자 skchoi@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 ▶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31&aid=0000535823